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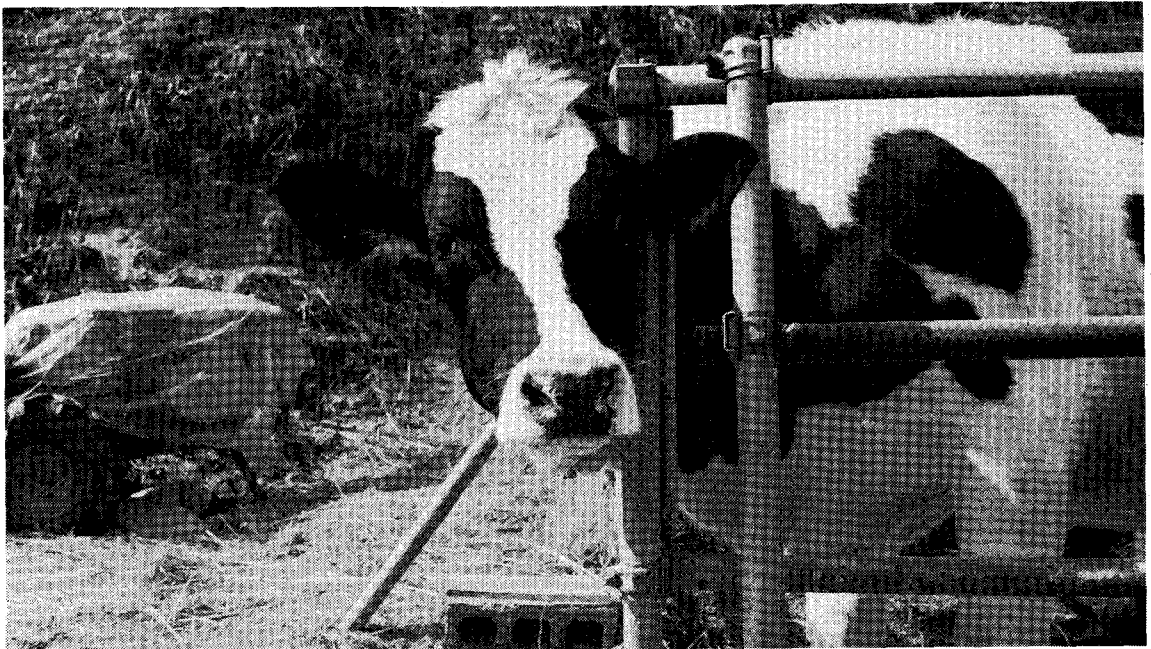
정 부

# 낙농육우산업은 생산자 주도하에....

신 구 범  
농림수산부 축산국장

현 재 우리나라농육우산업은 유대일부가 분유로 지급되고, 수입개방압력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수입고기에 대해 정부는 최고가를 수입해도 산지 소값은 적정수준을 유지해나가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향간에 수입최고기의 한우고기 둔갑판매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정부는 수입최고기 동시판매점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3,000여개소를 정비하여 1,995개소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3월 1일부터 일선 시도 군청에도 수입최고기에 대한 유통개선대책을 시달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대 13%인상후 소비자가격은 지역에 따라 25~47%까지 인상되었으며, 유대인상시 몇몇 낙농지도자들은 현재의 분유체화는 6월경에는 자동조절 될 것이며, 유대인상으로 발생하는 우유체화문제는 정부에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유업체는 우유체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4,5월경에도 집유쟁탈전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모든 상황



이 우리 낙농산업의 현주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시유를 연간 30.8kg을 섭취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우유소비량의 77%로 외국의 40%의 두 배를 육박하는 수준으로 이런 소비구조하에서 85년도와 87년도 상반기의 어려움은 가공유제품을 개발하여 소비를 확대하지 않는한 잠재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와 유업체의 수급판단의 파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올 1월말 17,000톤의 분유재고가 있으며 특히 충청도 지방에서는 원유자체가 적체되어 땅바닥에 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어 정부가 5,000톤을 수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단기적인 대책안을 지난 12월 우유수급 안정대책으로 발표하였으나 생산자, 정부, 유업체, 모두가 보는 시각에따라 졸작 중 졸작이라고 혹평을 했습니다. 작금의 우유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를 늘이고 생산을 줄이는 것으로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하나 소비자가격은 정부규제 가격이 아니라 자율가격이기 때문에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생산자, 유업체의 공동 역할 분담이 있어야 하며 시장기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조정해 나가기 위한 방안인 도태에 대해 많은 낙농가의 반발과 불만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작년 유대 13% 인상이후 저능력우로 도태되어 나온 것이 예년의 7~8만두의 70% 수준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유량이 하루 13kg이 되어도 경영유지가 되므로 고깃소로 도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88년도 젖소사육두수는 48만두, '89년도 51만 5천두로 증가되었으나 도태는 예년 수준을 밀돌고 있는 실정으로 일부지역에서는 도태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줄 압니다. 정부는 수입쇠고기 방출을 억제하는 등 산지 소값의 적정수준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도태는 예년에 비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0톤의 재고분유가 있으며 이중 정부수매 5,000톤, 대용유로 2,000톤, 낙농가에게 환원되는 분유 2,500톤(현재까지 960톤) 등을 합하여 7,000톤 정도의 재고분유만 남게되며 이는 분유재고의 적정수준으로 정부는 이를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현재 470만명의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를 600만명으로 증가하여 6,000~8,000톤, 도태로 인해 5,000톤 정도를 소비시켜 적정수준을 유지 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안입니다.

긴 안목에서 97년도 개방시대에 대비해서 정부는 낙농산업을 지속 유지해 나갈 방침이며 이에 대비한 장기축산 발전안이 곧 나올 것이며 낙농산업 부문은 가족경영낙농, 생산비 절감을 위한 방안, 예를 들면 사료의 부가세 철폐 등의 제도적·구조적 문제 등의 개선책을 관철시켜나갈 것입니다.

지난해 개정기로 하였던 낙농진흥법은 기본내용이 낙농업의 생산자 주도하에 집유권, 검사권 등이 주요골자이나 낙농위원회의 상설, 비상설 논의로 지연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국회에 상정하여 낙농가 여러분의 손으로 집유하고 검사하며 가격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월 국회는 정치국회이므로 그 다음 국회에 상정도록 하겠으며 정부는 낙농진흥법의 낙농위원회가 상설, 비상설이든간에 우리나라에 낙농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할 역할과 도리를 최대한 충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수급문제에 대해 많은 낙농가가 이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인은 97년도 개방시대에서 우리 낙농업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정부와 생산자가 합심해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개방 압력은 생산자와 정부가 합심해서 대응해 나가야만 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낙농가 및 육우농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